

## '92년도 체신부 통신정책 방향

朴 榮 一

遞信部 通信政策審議官

### I. 통신환경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통신사업의 민영화와 자율화·개방화 추세의 확산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사업의 민영화와 개방화 추세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과 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술의 혁신으로 통신장비의 가격이 하락되어 통신사업에 필요한 설비투자 비용이 감소되고 있고, 컴퓨터의 보급 확산과 사회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수요도 데이터 통신을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서비스 수요의 고도화와 다양화 및 기술 발달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의 감소는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 욕구와 필요성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다가올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통신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며 통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신사업에 경쟁도입 정책을 추진해 왔다. '90년 7월에는 1세기 동안 유지해 왔던 전기통신사업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중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으로 2원화 되어 있던 통신사업을 일반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적정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전파법과 전산망법을 개정하여 전파산업을 육

성하고 전산망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주)데이콤이 국제전화사업에 참여하여 한국통신과 함께 미국, 일본, 홍콩 3개 국가에 대해 경쟁적으로 국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I. 우리나라의 통신수준과 통신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전화시설은 '91년말 현재 1,700만 회선을 넘어 시설면에서는 세계 9위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전국 전화가 모두 자동화 되는 등 기본통신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과 데이터 통신 등 고도통신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정보 이용의 대중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신의 양적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고도화와 고객 중심의 복지통신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한정된 조직과 재원에도 불구하고 TDx를 독자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선통신·데이터통신 등 고도통신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로 외국기술의 소화·개량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심정이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전기통신관련법령과 전파법, 그리고 전산망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마련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무선통신 분야와 데이터통신 분야에 경쟁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분야에 제2사업자를 허가하여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적극 유입함으로써, 무선통신 분야를 활성화하고 적정 경쟁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부가통신 분야도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VAN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여 데이터통신, 정보제공, 정보처리, S/W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고 전신·전화등 기본 통신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기피 현상을 극복하고, 질 좋고 저렴한 기기를 개발·생산하여 통신사업의 기반이 되는 첨단통신 설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수출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Ⅲ. '92년도 중점시책

#### 1.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91년 12월에 신규참여한 (주)데이콤의 국제전화 제공 대상국가를 미국, 일본, 홍콩 3개국에서 '92년 8월부터는 영국, 프랑스 등 52개 국가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다양화등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동전화를 위시한 이동통신은 이용의 편리성 및 단말기 가격의 하락으로 이동통신 이용계층이 확산됨에 따라 당분간 국내 이동통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에는 이동전화는 약 450만, 무선호출은 약 400만 가입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보안 등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이동통신 시스템 장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동전화와 무선호출분야에 제2사업자를 신규허가하여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적극 유입함으로써 무선통신분야를 활성화하여 다양하고도 고도화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전화는 전국단위의 사업을 하는 1개의 사업자를 신규허가하여 기존의 한국이동통신(주)와 복점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무선호출사업은 지역생활 문화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그리고 사업성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한국이동통신(주)과 그 구역을 같이 하되, 다만 충청권은 충남·북으로 나누어 전국을 9개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구역별로 1개 사업자(수도권은 2개 사업자)를 신규로 허가하여 복점내지 과점 경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허가추진은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허가신청요령을 동시에 공고하고, 허가신청서도 같이 접수하며, 허가신청 방식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참여 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콘소시움을 구성하되, 중복신청은 금지하여 1개 사업자가 1콘소시움에만 참여토록하여 희망업체의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허가심사는 1, 2차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탈락한 기업도 승복하게 될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차로 주요 주주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영업계획, 기술계획을 심사하여 2~3개 업체를 선발한 후 2차로 통신망 건설능력과 통신사업발전(특히 무선통신기술 연구개발)에의 기여 계획 등을 심사하여 최종 허가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허가와 관련하여 '9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독일, 홍콩등 6개국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였고, '91년 11월에는 체신부, 연구소 및 회계사등 관계전문가 17명으로 허가추진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동 심사기준에 대해 학계, 관련업계, 언론계, 법조계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할 예정이고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을 공고시에 미리 공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개시일, 서비스보급율, 연구개발 출연계획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과 허가후의 실현성을 사전에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업의 경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및 환경조건을 위해 금년에는 상호접속방법과 서비스공급 조건등을 규정한 통신망공공규정을 제정하고, 합리적 통신요금과 통신망간 접속료 산정을 위한 통일 회계제도를 정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92년 상반기에는 체신부에 준입법·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통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사업자의 지정·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간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사항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통신망간 설비의 상호접속이나 설비제공등에 따른 사업자간의 분쟁과 손실보상등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재정보로 할 계획이다.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는 과거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이용자중심 체제로 전환되어 국민들의 통신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이 강화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통신사업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도 경쟁이 도입되고 신규서비스가 도입되어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정보통신 기술개발 강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적극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먼저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전년보다 29.6%가 늘어난 2,488억원을 연구 개발비로 투자할 계획이며, 정보부유 한국통신 주식배당 적립금으로 이미 조성된 600억원을 토대로 '93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하여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실용화사업 그리고 정보통신설비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국내 통신기술을 조속한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기 위해 연구조직도 점차 확충해 나가고 한정된 국내 연구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기관간의 기능도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과학기술처 산하 특정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우리부로 이관받아 공통·기반기술을 중점 담당케하는 한편, 통신사업자의 자체연구 기능도 확대하여 응용 및 상용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연구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기능별로 특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내기술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피 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의 조기 자립을 위해 '89년부터 '94년까지 장기적인 이동통신 기술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계획을 '96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과 단말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91년말 계획을 보강하여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과 단말기 개발을 '94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아날로그 방식의 초소형 휴대용 단말기와 부품개발을 추가하고 연구비도 72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91년 7월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이동통신 관련 연구조직을 본부단위로 확대·보강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민간기업체를 참여시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제2사업자 허가를 계기로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으며, 국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산제품의 안정된 내수기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쌍무적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3. 정보통신사업 육성

한·미통신회담 타결에 따라 '94년부터는 VAN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폐지하여 100% 허용키로 함에 따라 외국의 VAN 사업자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VAN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내 VAN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VAN 사업자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음성·데이터 복합서비스 허

용을 검토하고, 무역업무 자동화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제공업자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화요금과 데이터통신요금을 각각 부담하던 정보 검색료는 패킷망을 구축하여 데이터 통신요금 부담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전산망 2단계사업에 착수하여, 우체국종합서비스등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증권등 제2금융권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나갈 계획이며,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전산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전산망 기술자문과 관리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정보통신기기 전문 리스회사를 설립하여 국산 정보통신기기의 확대보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4. 무선통신의 활성화

유선통신에 비하여 기술수준이나 서비스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무선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파정책을 종래의 규제위주에서 이용촉진 방향으로 전환하여 허가나 신고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무선국의 출력을 상향조정하고 무선설비의 임대요건은 대폭 완화하는 한편, 주파수분배내역과 이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전파이용의 활성화와 산업육성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

'91년에 전파법이 개정되어 '93년부터 전파사용료 징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산출기준과 부과·징수방법 및 재원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통신사업 경쟁도입에 따른 다수사업자 등장으로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 통신사업자와 방송사등 사용자별 주파수 분배대역폭을 조정하고, 주파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의 방송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방송국의 신설 요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방송주파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신설될 방송국은 저지대·저출력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의 방송국에 대하여도 재배치 방안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파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대학에 전파공학과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파공학과 설치대학에 '95년까지 실험실습 기자재와 장학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고 그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통신·방송위성사업 추진

'95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위성은 통신, 방송복합위성으로 통신용 중계기가 12기이고 방송용 중계기가 3기이다. 제공할 서비스는 직접위성방송, 고속 데이터통신, 종합유선방송중계등이 될 것이며 총사업비는 3,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91년에는 미국의 GE사와 위성체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발사체의 국제입찰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금년에는 '95년 무궁화위성 상용서비스에 대비하여 위성운용기술을 습득하고, 통신위성 수요창출을 위해 상반기중에 인텔새트로 부터 입차한 국제위성 중계기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시범위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위성통신, 위성방송시대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위성사업 운영·관리체제와 위성채널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 정보통신의 기반강화

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도화하여 다양화되는 통신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기능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통신망의 확충을 위하여 '92년에 전화는 201만 회선의 디지털 교환기를 신규로 공급하고, 이동전화는 전국의 시 이상 지역에 대한 서비스망 구축을 완료하며, 통화완료율을 65% 수준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기계식 교환시설은 '95년까지 완전 철거를 목표로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한편, 가입자선로는 금년부터 폼스킨케이블을 전면 공급할 계획이다. 장거리 통신 분야는 서울-부산과 대전-광주간에 광케이블을 추가 건설하여 기간전송로를 대폭 확충하고, 전국의 주요도시에는 2원화된 시외전화망을 구축하여 시외통화 품질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로 전화폭력 방지를 위하여 수신자가 요청할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전화번호 확인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고 일반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신용카드 국제공중전화서비스를 보급하며, 무선호출 음성사서함등 무선통신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7. 남북통신 재개 준비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한간의 교류 확대와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통신 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통신방식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공동연구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화와 TV 개통에 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북한의 통신시설은 현재 전화가 70만대 정도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북한이 원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TDX등 국내개발 첨단장비를 북한의 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고 남북한 통신재개시 통신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현재의 남북한간 전송로외에 경원선, 경의선 철도연변 광케이블 전송로 건설도 북한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이제 정보통신은 산업전반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경제·사회의 기반구조로서 사회의 정보화 진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통신수준을 조속한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여건과 환경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특히 기본통신 분야에 비해 낙후된 무선통신 분야와 데이터통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도화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0년대까지는 G-7 수준의 통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개발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筆者紹介



朴 榮 一

1941年 3月 31日生

1959年 3月 서울상대 무역학과

1965年 2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4年 7月~1985年 8月 체신부 총무과장

1985年 8月~1987年 8月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기획과장

1987年 8月~1988年 7月 강원체신청장

1988年 7月~1989年 1月 우정연구소장

1990年 1月~1991年 7月 전파연구소장

1991年 7月~1991年 11月 체신부 공보관

1991年 11月~현재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정책심의관